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3.0 성과 창출 방안

정도범* · 박성욱** · 김은진***

I. 서론

1. 오픈 데이터 정책의 중요성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오픈 데이터(open data)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 채승병·박성민, 2013).

- 오픈 데이터는 누구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접근 및 공유·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하며, 최근 데이터 수집·저장·분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오픈 데이터에 주목

- 데이터의 개방을 통해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의 출현 및 이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 등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특히, 공공데이터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

*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 및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행정, 경제, 인구, 의료, 기상, 교통, 복지 등의 모든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

- 따라서 각국의 정부는 새로운 혁신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써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의 활용을 촉진

<표 1> 공공데이터의 활용 가치

파급효과	비고
· 경제적 파급효과 : 연 24조원, 고용 창출 : 연 15만 명	KAIST('12)
· 공공데이터 개방 직접 효과(EU 27개국) : 연 400억 유로(약 60조원)	EU('11)
· 일자리 창출 : 약 6만 개, 잠재가치(예상) : 약 150억 파운드(약 25조원)	영국 정부
· 기상데이터 활용 : 4,000개 일자리 창출, GPS데이터 가치 : 900억 달러	미국 정부

참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13년-17년)

미국은 2009년 투명성(transparency), 국민 참여(participation), 민관 협력(collaboration)을 통해 열린 정부 실현을 강조하며 오픈 데이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 '09년 12월,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여 '투명성과 열린 정부'의 구체적인 실시 계획 마련

- 또한 '09년 5월,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 및 일반 대중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오픈 데이터 단일 포털인 Data.gov을 개설

- '13년 5월, 정부 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개방하고,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 formats)로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dbchung@kisti.re.kr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 실장, supark@kisti.re.kr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kimej@kisti.re.kr

공개하도록 의무화

- 이에 따라 미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규모와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영국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다른 국가 대비 한 단계 빠른 오픈 데이터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 '07년 6월, '정보의 힘(Power of Information)'이란 보고서를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강조하며, 범정부 차원의 정보 재활용 전략을 수립
- '10년 1월, 오픈 데이터 단일 포털인 Data.gov.uk의 개선을 통해 데이터 공개 채널로서의 입지 확보
- '10년 6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 투명성 제고 및 경제적 이익의 실현을 추구하는 '투명성 아젠다' 발표
- '12년 11월, 공공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의 발굴 및 창업을 지원하는 '오픈 데이터 인스티튜트 (Open Data Institute)' 설립

호주는 2010년 7월 '열린 정부 선언(Declaration of Open Government)'를 발표하며 오픈 데이터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 열린 정부 선언에서 투명한 정부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원칙으로 공지(informing), 관여(engaging), 참여(participating)를 제시
- '11년 3월,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데이터 공개 포털을 통합한 Data.gov.au을 개설
- '11년 7월, 'AusGOAL(the Australian Governments Open Access and Licensing Framework)'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 절차를 대폭 간소화
- 호주의 '공공 서비스 ICT 전략 2012-2015'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개방은 '15년까지 범정부 차원의 정책 일환으로 진행될 계획

반면, 일본은 오픈 데이터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추진 중에 있으나, 미국, 유럽 등의 국가에 비해 다소 뒤쳐지는 상황이다.

- '12년 7월, 공공데이터의 공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전자행정 오픈 데이터 전략'을 수립
- 또한 '액티브 재팬(Active Japan) ICT' 전략의 추진을 통해 데이터 기반 ICT 융합서비스 육성
- '13년 12월, 공공데이터 포털인 Data.go.jp의 베타 버전을 공개하였으나, 운영 4개월 만에 중단
- 일본의 오픈 데이터 정책은 한정된 개방 범위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15년 말까지 타 선진국과 유사 수준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달성을 기대

<표 2> 주요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정책

국가	정책	주요내용
미국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 ('09)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개방 원칙 설명
	Data.gov ('09)	일원화된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개설
	오픈 데이터 이니셔티브 ('12)	데이터 기반 서비스 창출 지원 및 관련 신생 벤처 육성사업 전개
	오픈 데이터 정책 ('13)	정부의 모든 데이터 공개 및 개방 지시
영국	Data.gov.uk ('10)	일원화된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개설
	투명성 아젠다 ('10)	공공데이터 개방 원칙을 정부 기관에 지시
	오픈 데이터 인스티튜트 ('12)	데이터 기반 서비스 창업을 위한 교육 실시
호주	열린 정부 선언 ('10)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 원칙 설명
	Data.gov.au ('11)	일원화된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개설
	AusGOAL ('11)	공공데이터 개방 절차 간소화
일본	전자행정 오픈 데이터 전략 ('12)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 원칙 설명
	액티브 재팬 ICT ('12)	데이터 기반 ICT 융합서비스 육성
	Data.go.jp ('13)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베타버전 운영

참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4), 채승병·박성민(2013) 등 관련 자료

2. 우리나라의 현황

우리나라도 오픈 데이터 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 ‘정부3.0’을 통해 공공정보 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 133번에서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을 강조
-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기존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13.8월)
- 또한 공공데이터의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촉발하는 법제화가 요구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3.7월) 및 시행('13.10월)
- 이 밖에도 국가오픈데이터포럼 출범('13.7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개소('13.11월) 등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표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중 일부 내용 발췌

<p>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定)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p> <p>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표 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중 일부 내용 발췌

<p>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하지만 2013년 월드와이드웹재단이 발표한 ‘오픈 데이터 지표(Open Data Barometer)’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오픈 데이터 순위는 77개국 중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을 강조하는 ‘정부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인 영국(100점)의 절반 정도인 54.21점으로 12위에 그침

* 오픈 데이터 순위는 준비도(readiness), 실행력(implementation), 영향력(impact)을 토대로 산출

- 우리나라는 준비도 및 영향력에 비해 공공데이터의 개방 정도나 형태 등을 반영하는 실행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오픈 데이터의 실질적인 수준은 미흡

-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위해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정책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기계 판독이 가능한 원천데이터 개방, 품질 개선 등 민간에서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표 5> 오픈 데이터 활성화 순위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영국 (100.00점)	5	노르웨이 (71.86점)	9	독일 (65.01점)	13	아이슬란드 (51.01점)
2	미국 (93.38점)	6	덴마크 (71.78점)	10	프랑스 (63.92점)	14	에스토니아 (49.45점)
3	스웨덴 (85.75점)	7	호주 (67.68점)	11	네덜란드 (63.66점)	15	핀란드 (49.44점)
4	뉴질랜드 (74.34점)	8	캐나다 (65.87점)	12	한국 (54.21점)	16	일본 (49.17점)

참고 : World Wide Web Foundation (2013.10.31)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창조경제를 이끄는 수단으로써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공공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다양한 우수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또한 다른 분야에 비해 ‘정부3.0’ 관련 사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발굴 등과 같은 성과 창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정부3.0 추진 현황

1. 정부3.0의 개념

공공정보를 잘 활용하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좀 더 손쉽게 만들고 공유가 가능하다.

- 2009년 11월, ‘서울버스’ 응용프로그램(앱)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됨

<표 6> ‘서울버스’ 응용프로그램(앱) 사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 11월, 당시 고등학생인 유주완 군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울 및 경기 지역의 버스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버스 노선도부터 운행시간, 실시간 운행정보까지 보여준 ‘서울버스’ 응용프로그램(앱) 개발- 이 앱은 등장 후 한 달 만에 4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며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큰 사랑을 받음- 하지만 이 앱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데이터를 허락 없이 가져다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아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함- 논란 끝에 서울시와 경기도와 공공정보 사용을 허용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이 사건은 국내에서 공공정보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논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됨 |
|--|

참고 : 각종 뉴스기사

- 이처럼 공공데이터는 사회·경제적으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으며,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경쟁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

-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범위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요구

박근혜 정부는 ‘정부3.0’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공공 부문 전반의 일하는 방식과 국민 서비스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안전행정부, 2014).

-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국민 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
-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두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증진되는 혁신 생태계 조성
-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형 정부운영 지향
-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

<표 7> 정부3.0의 개념

<정부3.0>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참고 : 정부3.0 홈페이지

이처럼 최근의 정부는 업무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의 대화와 협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 기존의 일방향 정부(정부1.0)를 넘어, 양방향 정부(정부2.0)에서 한 단계 진보한 맞춤형 정부(정부3.0) 선언
- 정부3.0은 그 동안 공급자의 관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개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춤
- 즉, 정부1.0 시대에는 정부 중심으로, 정부2.0 시대에는 국민 중심으로, 그리고 정부3.0 시대에는 개인 중심으로 서비스 운영방향이 변화
- 정부3.0 시대에서는 정부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 국민들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정부에서 사전에 파악하여 제공하는 맞춤형·지능형 정부로, 정보서비스 제공자에서 정보서비스 플랫폼 제공자로 정부의 새로운 역할 강조(홍필기, 2013)

<표 8>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구분	정부1.0	정부2.0	정부3.0
운영방향	정부 중심	국민 중심	국민 개개인 중심
핵심가치	효율성	민주성	확장된 민주성
참여	관 주도·동원 방식	제한된 공개·참여	능동적 공개·참여, 개방·공유·소통·협력
행정서비스	일방향 제공	양방향 제공	양방향·맞춤형 제공
수단(채널)	직접 방문	인터넷	무선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참고 : 정부3.0 길라잡이 (안전행정부, 2014)

2. 정부3.0의 추진 방향

정부3.0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국정 전 분야에 적용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제시한다(안전행정부, 2014).

- 이를 위해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와 같은 3대 전략 및 10대 중점과제를 추진
 - * 2014년 9월 19일, 3대 목표 및 8대 핵심과제(25개 단위과제, 64개 세부과제)로 수정되었으며, ‘서비스 정부’를 보다 강조(정부3.0 추진위원회, 2014)
 - * 정부3.0 추진을 위한 큰 방향은 변경되지 않아, 기존 내용 위주로 설명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는 공공정보의 사전 공개, 원천데이터 개방 및 정부의 업무수행에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하는 과제를 중점 실행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공공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행정을 구현하는 과제를 중점 실행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 제공하고, 윈스톱 지원 확대 및

공공서비스 전반에 첨단ICT 기술 등을 도입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과제를 중점 실행
 -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①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②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③ 민·관 협치 강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④ 정부 내 칸막이 해소 ⑤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⑥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⑦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⑧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⑨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⑩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그림 1) 정부3.0의 중점 추진과제

따라서 정부3.0과 창조경제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서비스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

-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원천데이터의 개방 수요 증대 및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원천으로 공공데이터의 가치 부상

-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노력 추진

-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1,576개 기관에서 21,087종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3,395종을 개방(개방률 16.1%)

-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13~’17) 로드맵에 따라 9,259종을 추가 개방하여 개방률 60%를 목표로 제시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15대 전략분야 집중 개방 계획 마련

* 공공데이터 개방률 : (’13.10) 3,395종, 16.1% → (’17) 12,654종, 60%

- 참고로,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보공개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표 9>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차이

구분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근거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공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향상
제공대상	전자적·비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일반문서 중심)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데이터베이스 중심)
제공형태	특정한 공개 형태가 없음	반드시 기계판독이 가능한 (machine-readable) 형태
활용범위	국민 알권리 신장 (저작권 정보는 상업적 활용 제약)	자유로운 상업적 활용 및 제공 가능 (제약 없음)
대상예시	버스운행계획보고,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등	실시간 버스운행(노선, 위치, 도착시간 등) 데이터 등

참고 : 정부3.0 길라잡이 (안전행정부, 2014)

하지만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는 데에만 주력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3.0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범정부적 확산을 중점 추진하였으나, 기관 단위의 의식·문화 일하는 방식 등의 변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는 실정(안전행정부, 2014)

- 즉, 아직까지 공공데이터가 지닌 잠재적인 가치나 개방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이나 공감대 형성 부족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은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성과 창출이 가능하지만, 성공사례 부족, 시장형성 미흡 등으로 성장 환경 취약

- 정부3.0의 비전 및 변화 방향 등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나, 정부3.0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우수사례 확산 필요

* 정부3.0의 국민 인지도는 34%에 불과(’13.11월)

<표 10> 정부3.0 추진 시 미흡한 점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잘 모른다. or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성공사례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 참여가 미흡하다.- 기관들 간의 편차가 크다. |
|--|

참고 : 2014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 (2014년 정부3.0 추진전략)

-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 정부3.0의 추진방향으로 정부3.0 성과 창출을 통한 국민체감도 제고를 강조
- 즉, 정부3.0 관련 다양한 우수사례의 확산을 통해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임

Ⅲ. 정부3.0 우수사례

정부3.0의 핵심가치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정부3.0 관련 교육이나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3.0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수사례의 창출 및 확산이 중요하다.

- 정부3.0 관련 계획 수립, 회의 개최, 책임관 지정, 교육·홍보 등을 통해 다방면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외부적인 인식 부족 및 기관 차원의 실천이 저조

- 정부3.0 기반의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이 필요

- 이를 위해 안행부, 미래부 등은 범정부 차원에서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

본 연구에서는 정부3.0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가치 확산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우수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정부3.0 우수사례를 통해 정부3.0의 추진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며,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이 가능

- 흔히, 빅데이터 분석 사례로써 알려진 성과들도 정부3.0 관련 사례가 될 수 있음

*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경찰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 8년간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과 유형의 분석을

통해 범죄지도(crime map)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범죄를 예방

* 또한 서울시와 KT는 30억 건의 콜 데이터와 가입자 주소지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방향으로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

- 즉, 수요자의 니즈(needs)에 맞춰 인식 전환 및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일부 개선함으로써 정부3.0 사례가 될 수 있음

- 정부3.0 사례는 새로운 서비스도 있지만, 공공데이터의 활용 등을 통해 기존의 서비스를 일부 보완 개선한 것이 대부분임

- 따라서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사례 등 다양한 정부3.0 사례를 통해 정부3.0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가치를 공유 확산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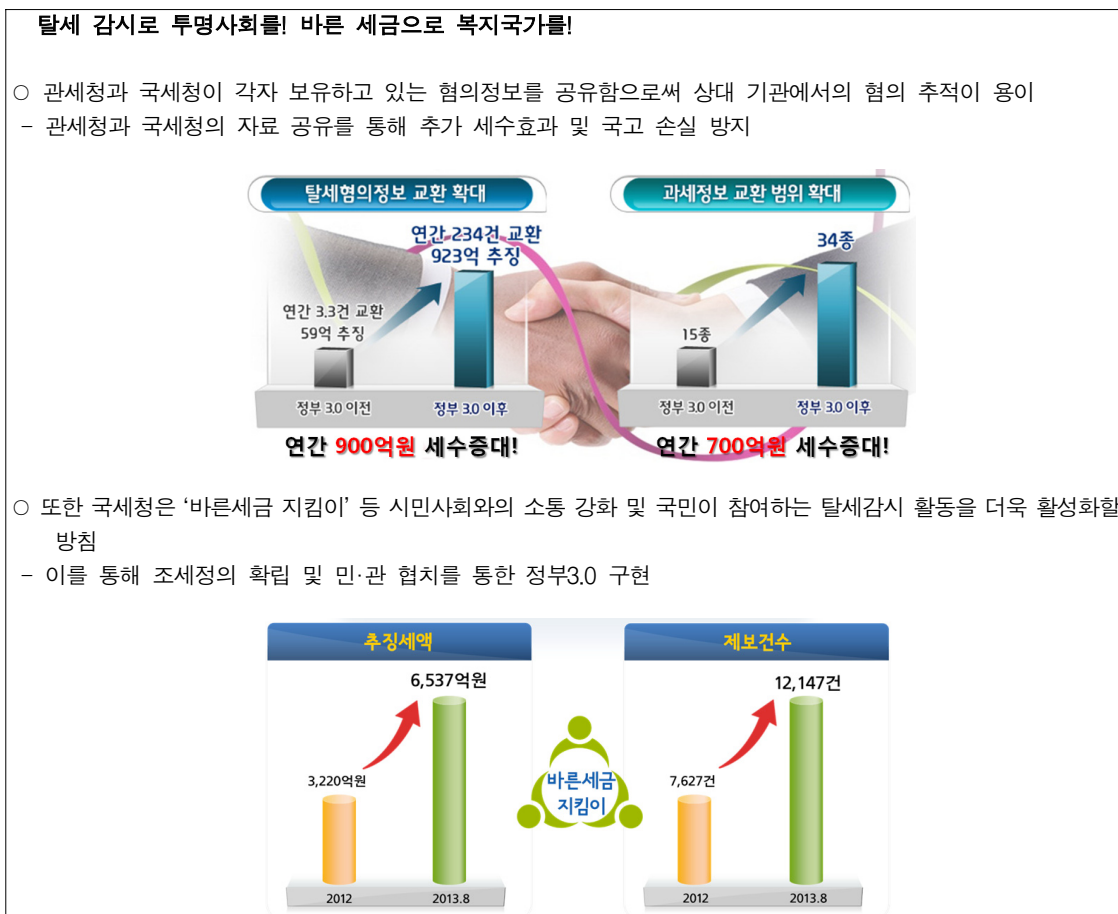
1) 관세-국세 정보공유로 역외탈세 방지 (관세청-국세청)

- 관세청과 국세청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역외탈세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혐의정보 적극 공유

- 이를 통해 인력이나 예산의 추가 투입 없이 정보공유만으로 역외탈세와 불법 외환거래를 감시

- 또한 국세청은 시민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를 정식 출범시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뉴거버넌스’ 탈세감시 활동을 전개

<표 11> 관세-국세 정보공유로 역외탈세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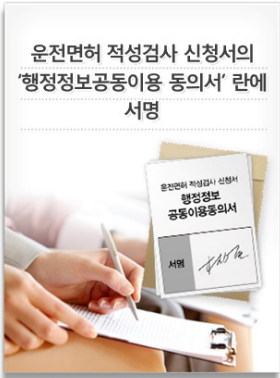
2) 건강검진자료 공동활용을 통한 운전면허 발급 간소화 (복지부-경찰청)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은 각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가건강검진정보를 공동 이용
- 그동안 운전면허를 발급 받거나 갱신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4,000원)를 실시
- 2013년 8월 1일부터 국가건강검진정보를 활용하여 별도의 건강검진이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 발급 가능

<표 12> 건강검진자료 공동활용을 통한 운전면허 발급 간소화


운전면허증, 신체검사 받지 않고 발급·갱신!

○ 최근 2년 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시력·청력)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직접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신체검사 불필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란에 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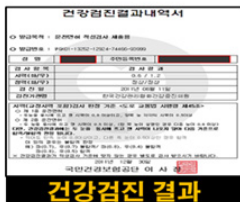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건강검진결과 자료 열람 후
운전면허 발급·갱신

○ 건강검진자료 공동이용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 공유를 통해 많은 국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부3.0의 대표적 협업 사례

- 연 300만 명(신규 140만 명, 갱신 160만 명), 161억 원의 비용 절감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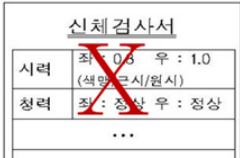
16세 이상 중 약 53%가 2년마다 건강검진

↔

행정정보 공동망을 통한 공유

↔

경찰청(면허시험장)



신체검사서

시력: ~~좌: 0.6 우: 1.0~~
(색안경시/원시)

청력: ~~좌: 청각 우: 정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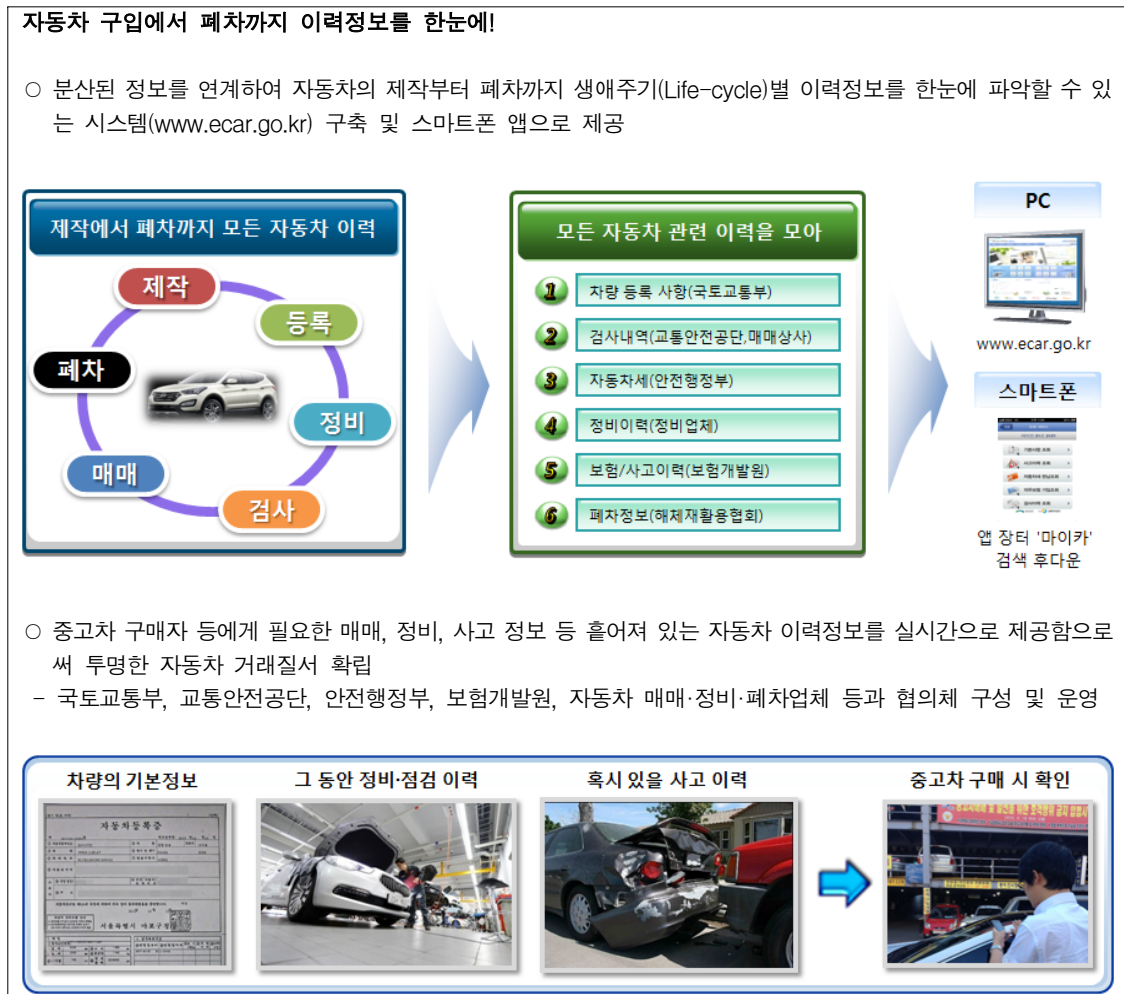
시력·청력 검사 대체

3) 자동차 토털이력정보 서비스 (국토교통부)

- 공공기관 업체별로 분산되어 칸막이식으로 관리하던 자동차의 생애주기(Life-cycle)별 정보를 연계·통합하여 인터넷·모바일로 제공

- 자동차의 제작에서 폐차까지 모든 자동차 이력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중고 자동차 시장의 투명성 증가 및 국민의 시간·비용 절감에 기여
- 자동차 토탈이력정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개방·공유·소통·협력이란 정부3.0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관 협치, 칸막이 제거, 공공정보 적극 공개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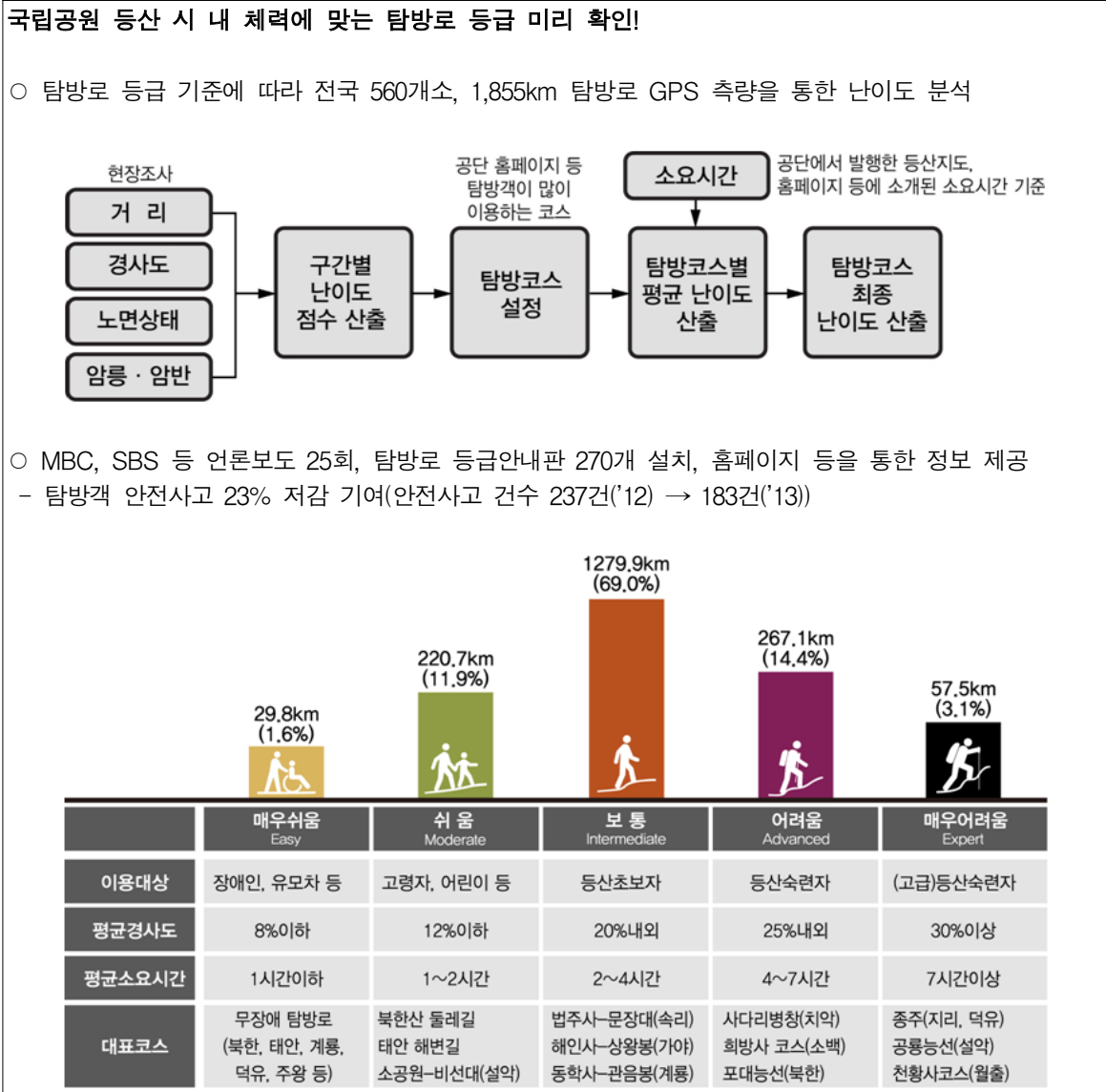
<표 13> 자동차 토탈이력정보 서비스



4) 국립공원 탐방로 등급 공개 (국립공원관리공단)

- 탐방로의 정확한 정보(난이도)를 모르고 산행함에 따른 탈진, 부상 발생 빈번 등으로 인해 탐방로 정보는 탐방객이 가장 궁금한 정보 1위
- 연간 4,000만 명이 넘는 국립공원 탐방객들을 위해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5단계의 탐방로 등급정보 제공
- 향후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원별, 탐방로별, 시간대별 탐방객 수와 인근 숙박, 맛집, 교통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DB화하여 개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

<표 14> 국립공원 탐방로 등급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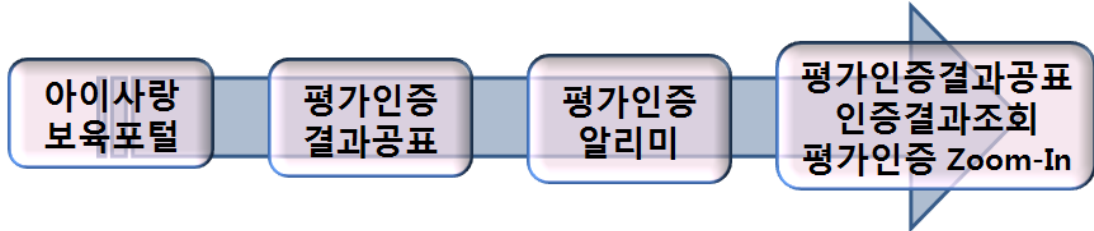
5) 어린이집 평가 인증결과 공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정부3.0 이전에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 여부만을 공개
- 정부3.0을 추진함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총점과 영역별 점수, 미비한 점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까지 공개를 확대하여 부모의 알권리 충족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급식·차량 안전관리 미흡 등 어린이집 불법행위들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표 15> 어린이집 평가 인증결과 공개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결과!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확인!

-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학부모가 알고 싶은 보육교사 수, 특별활동비, 급식현황, 위반처분내용 등을 직접 확인
- 평가인증 여부(인증, 미인증), 인증 총점 및 영역별 점수, 종합 평가서, 평가인증 이력, 시설 유형·지역별 평균 등 비교가능 정보를 함께 공개



-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들의 선택권 확대 및 민간도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선



6) 58,000여개 병원정보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내 병원정보 전문제공업체인 에이디벤처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메디라떼’라는 의료 서비스 전용 응용프로그램(앱)을 개발
- 58,000여개 병원정보에 대한 실시간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만족도 제고 및 고용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많은 정보와 혜택을 주는 ‘메디라떼’는 정부3.0의 패러다임과 일치

<표 16> 58,000여개 병원정보 공개

병원정보를 활용한 앱, 메디라떼!

- ‘메디라떼’는 환자가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로 50만 명의 회원 수와 하루 평균 3만 명의 방문자, 월 매출 2억 원 수익 창출
 - 기존에는 환자의 여건에 맞는 병원정보 제공창구 부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활용
모바일 앱 서비스 ‘메디라떼’**

As-Is (기존)

환자의여건에 맞는 병원정보 제공창구 부재

➔

To-Be (개선)

실시간 맞춤형 병원정보 제공으로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및 의료만족도 제고

-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와 민간이 가진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창조경제로 연결한 대표적 사례



IV. 과학기술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분야의 정부3.0 우수사례와 달리,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 하는데 집중하고 있지만 우수사례 창출은 미흡한 실정이다.

-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창조경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설된 미래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정부 3.0 우수사례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
- 일반적으로 과학기술 분야는 수요자가 한정되어 있으며,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분야 및 범위를 확장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존재
- 따라서 단순히 정보공유를 넘어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재정의, 연구개발의 주기 등을 고려해야 함

- 현재 정부3.0과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의 서비스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1. 국가 차원의 서비스 사례

먼저,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창조경제타운의 경우 정부3.0 관련 맞춤형 서비스로 볼 수 있다.

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이하 ‘NTIS’)는 17개 부처·청과의 연계를 통해 연구과제, 인력, 시설·장비, 성과 등 약 107만 건에 달하는 국가R&D정보를 제공하는 지식포털이다.

- 국가 차원에서 국가연구개발 예산 투자 활동을 통해 생산된 과학기술 데이터를 일반 국민까지 공개 확대 (*13.4월) 및 연구자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각 부처별 연구과제 신청을 NTIS 홈페이지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정보연계시스템 기반 마련(*13.12월)
- NTIS를 통해 연구개발의 기획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

2014년에는 정부3.0의 가치를 적극 반영하여 국가R&D정보의 개방·공유·협력 강화로 국가과학기술 가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 과학기술 데이터 공개포털 시범 구축 및 LOD(Linked Open Data) 기반 국가R&D정보 공개·개방 확대
- * 과학기술 데이터 공개포털은 부처별 산재된 국가R&D 관련 과학기술 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등록, 관리, 유통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중소·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R&D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창조경제 활성화 지원
- 유익한 과학기술 관련 정보를 계속 확장하고, 이용자가 NTIS를 더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



(그림 2)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서비스(NTIS)

2) 창조경제타운

창조경제타운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집합하고, 아이디어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 전문적인 멘토링을 하며, 아이디어 제안자가 사업화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창조경제 지원 사업들에 연계하는 포털이다.

- 국민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치화하기 위해 국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 미출원 단계부터 기술이전 및 매출 단계까지 7개 단계별 맞춤형 지원·연계하는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 즉, 창조경제타운은 국민과 정부, 관련 부처 모두가 창조적 아이디어의 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창조적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가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2014년에는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창조경제 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 전국 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83개)가 주관하는 공과대학생 창의적 종합설계 아이디어를 타운을 통해 고도화 추진
-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공데이터 관련 단순 시범사업 및 일회성 경진대회를 타운과 연계한 창업 공모전 방식으로 전환
- 앞으로는 대기업의 민간 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오프라인 멘토링을 강화하는 등 아이디어 사업화 부문에서 국민 플랫폼으로써 정부3.0의 가치 확산

<표 17>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주요 성공사례

사례	내용	비고
365일 안심약병	약에 대한 환자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뚜껑을 열 때마다 표시된 요일이 바뀌는 기능을 추가	현재 인터넷 쇼핑몰 판매 개시
쓰레기 차단 빗물받이	배수구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차단하는 빗물받이 고안	국내 벤처기업 기술 이전 성공
얼굴인식 보안 단말기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한 뒤 출입문을 열어주거나 경보를 울리는 첨단 보안장치	9월 제품 출시 예정
이어톡	켓속에 넣는 무선 이어폰에 마이크를 내장해 거추장스러운 줄 없이도 잡음 없는 통화 가능	12월 제품 출시 예정
초슬림 키보드	얇으면서도 기존 키보드 느낌을 얻을 수 있는 '압전 방식' 키보드	'15년 제품 출시 예정

참고 : 창조경제지원사업단, 각종 뉴스기사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서비스 사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수행하고 있는 NOS(NDSL Open Service)와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등도 정부3.0 사례가 될 수 있다.

1) NOS(NDSL Open Service)

KISTI는 NDSL(<http://www.ndsl.kr>)의 접근성 및 활용성의 한계에 따라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과학기

술정보를 확산하고 민간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개방형 오픈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 NOS(NDSL Open Service, <http://nos.ndsl.kr>)는 국내 최대의 과학기술정보 통합검색서비스인 NDSL이 보유한 방대한 정보들을 NDSL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 다른 기관들의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방형 오픈서비스임

- Open API 등의 개방형 기술을 통해 누구나 쉽게 연계, 융합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 NOS를 이용하면 다른 기관들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도, 로그인도 없이 쉽게 NDSL의 모든 정보에 원스톱으로 접근할 수 있고, 원문까지 확보 가능

<표 18> NOS의 성공요인

추진 이전 (As-Is)	정부3.0 기반으로 서비스 개선		추진 이후 (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DSL 서비스 제공 - NDSL에 직접 접속을 통해 학술정보 이용 - NDSL을 잘 모르는 일반 이용자들은 접근이 어려움 	공공정보 적극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서비스 추진으로 공공정보 적극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S 운영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NDSL의 모든 정보를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제공 - 별도의 로그인 없이 NDSL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정보의 접근성 제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DSL의 방대한 정보를 민간에서 매쉬업(Mashup)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원스톱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숙한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NDSL의 정보 확보 ▪ NDSL의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로그인 없이 실시간으로 원문 다운로드 가능 	
	서비스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에 익숙한 연구원이나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도 학술정보에 쉽게 접근 	
	새로운 정보 기술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표준 요소 기술(OAI-PMH, REST, SOAP)을 적용하여 정보의 개방 및 활용 범위 확대 	

(주요성과)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 등 약 100여개 기관들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고, NOS를 통한 전자원문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NDSL 전체 전자원문 이용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수익 창출) 도서관용 디스커버리 및 검색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사의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하는 사례 증가

- (비용 절감) 많은 기관들에서 NOS 활용 및 연계를 통해 한정된 도서관 정보 자원의 한계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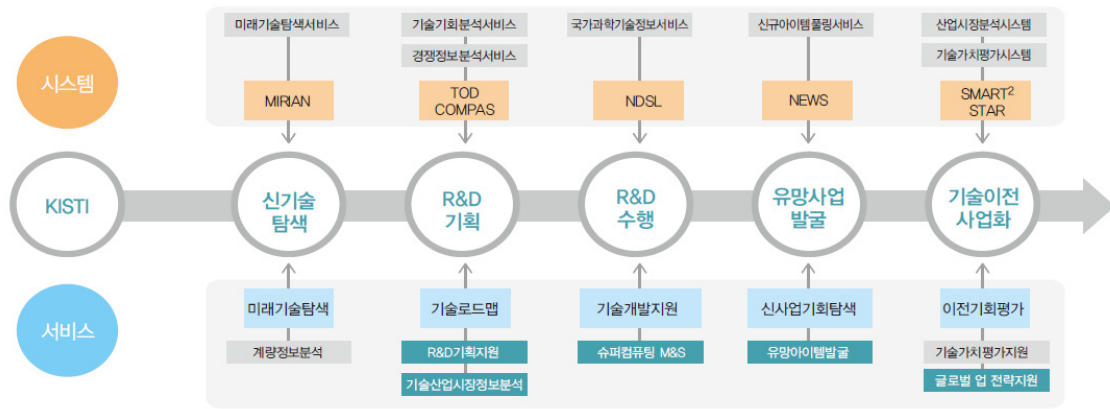
- (산업체 경쟁력 제고) NOS를 활용함으로써 산업계 최신 기술 트렌드 파악 및 텍스트 마이닝 등 2차 가공으로 자사에 필요한 정보로 재생산(매쉬업)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2) 중소기업 지원

KISTI는 정보분석 서비스와 시스템 인프라를 기반으로 신기술 탐색부터 기술이전·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 KISTI는 중소기업과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해 R&D 기획 지원 및 기술산업시장 정보 분석, 슈퍼컴퓨팅 M&S(Modeling & Simulation), 유망아이템 발굴 지원, 글로벌 업 전략 지원 등의 활동 수행

- 이처럼 다양한 방식의 중소기업 지원 활동은 중소기업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기술개발 현안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



(그림 3) KISTI의 중소기업 지원 체계도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KISTI의 중소기업 지원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례로써 정부3.0의 핵심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 (성공사례) (주)NUC전자는 신제품 관련된 분석 정보의 지속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식품가공기계의 사업성을 확인하였고,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을 통해 착즙기 스크류 각도 최적 조건 제시 및 설계 반영으로 제품 성능 개선
 - * 슈퍼컴퓨팅 M&S 지원 기업의 55.7% 개발기간 단축, 59.2% 개발비용 절감
- 중소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한 정보분석 서비스를 통해 수혜기업의 정보경쟁력 28.3% 향상, R&D 기획 역량 28.6% 강화
 - 또한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신규고용 창출, 신사업 발굴 등 창조경제 실현

3. 시사점

앞에서 설명한 정부3.0 사례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 및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 과학기술 분야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및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분석하여 수요자의 특성이나 요구사항, 불만사항을 반영해야 함
 - * NTIS는 국가R&D사업, 과제, 인력, 성과 등의 정보를 일반국민에게까지 대폭 개방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3.0 실현
 - * NOS(NDSL Open Service)는 이용자들이 NDSL에 직접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여 정보의 접근성 제고
 - 정부3.0에서 강조하는 정보 취약계층을 재정의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 도출
 - * 창조경제타운은 아이디어 제안자가 전문적인 멘토링을 받기 힘든 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를 해결
 - * KISTI에서 수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기술, 시장 등의 정보가 부족한 취약계층으로 인식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즉,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3.0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도 기존의 정부3.0 우수사례와 같이, 수요자 중심으로 기존의 서비스를 일부 보완 및 개선하는 것이 필요

-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정부3.0을 이해하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함으로써 국민의 행복 실현이 가능

과학기술 분야가 상대적으로 수요자가 한정되어 있지만 수요자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니즈를 파악하여 수요자의 범위를 보다 확장할 수 있고, 기존 서비스의 일부 개선을 통해서도 정부3.0의 사례가 될 수 있다.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애로사항이나 불만사항을 파악하여 실제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보완 및 개선

* 일반적으로 ‘스팸’으로 인식되는 메일링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특정한 기간 동안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단지 ‘기간 설정’ 기능만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정부3.0 사례가 될 수 있음

- 기존의 서비스에서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수요자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데이터를 확보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최근 과학기술 분야에서 개방형 혁신 및 융합연구 등이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다양한 기관들과의 개방·공유협력·소통하는 것이 필요

- 즉, 과학기술 분야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광범위한 영역에서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임

V. 결론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정부3.0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제공하였던 서비스를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정부3.0의 추진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

- 하지만 단기간 동안 많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보는 부족하고 여전히 실천이 저조한 실정

- 따라서 정부3.0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관 및 국민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음

-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정부3.0의 핵심가치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3.0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완전하게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이 아니라, 기존 서비스의 보완·개선함으로써 가능함을 명확히 인식해야 함

국가 차원에서 정부3.0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기대하기도 한다.

- 정부3.0의 핵심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데이터 분야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 즉, 정부3.0은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큰 기회이며, 스마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 수행
- 최근에 빅데이터의 분석·활용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데, 공공데이터 또한 빅데이터의 범주에 포함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
-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 발굴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함
- 과학기술 분야의 많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함께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것임
- 또한 타 분야와의 협력·융합을 통해 다양한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 개발 및 새로운 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3.0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창조경제 실현을 기대함

정부3.0 정책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정부3.0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경진대회, 공모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우수사례 발굴 및 교육·홍보 활동 강화
- 이와 함께 국가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공,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 제시 및 정부3.0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 공공데이터의 개방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개방하고 ‘데이터 홍수’의 시대에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또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수요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방안 모색
- 다른 무엇보다도,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은 기존에 제공하였던 서비스를 수요자의 입장에서 일부 보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13년~17년), 2013.12.10.
- 관계부처 합동 (2013),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2013.06.19.
- 미래창조과학부 (2014), 창조경제타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14.06.12.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4), “국가연구개발정보, 중소기업과 일반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개편”, 2014.05.08
- 박원준 (2014),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사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트렌드 포커스, 2014.03.
- 안전행정부 (2014), 정부3.0 길라잡이, 2014.03.
- 안전행정부 (2014), 2013 정부3.0 백서, 2014.06.01.
- 윤종인 (2014), “2014년 정부3.0 추진전략”, 2014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 2014.07.1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 “주요국의 오픈 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분석”, 해외 ICT R&D 정책동향, 심층보
고서, 2014년 02호.

정부3.0 추진위원회, 정부3.0 발전계획, 2014.09.19.

채승병·박성민 (2013), “스마트 뉴딜(New Deal) : 공공데이터 개방과 기업의 활용”,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907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4), “창조경제 그리고 중소기업”, 2014 KISTI 중소기업지원 성공사례, 2014.05.10.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오픈데이터 플랫폼과 국가 데이터 전략방향”, IT & Future Strategy, 제16호
(2013.12).

홍필기 (2013), “Gov 3.0 서비스”, 파워포인트 발표자료, 2013.04.26.

World Wide Web Foundation (2013), Open Data Barometer, 2013 Global Report, 31 October 2013.

<http://www.creativekorea.or.kr>

<http://www.data.go.jp>

<http://www.data.go.kr>

<http://www.data.gov>

<http://www.data.gov.au>

<http://www.data.gov.uk>

<http://www.gov30.go.kr>

<http://www.ntis.go.kr>